

국회의장단·상임위구성 완료

與, 민생·개혁법안 속도... 野, 최저임금 등 정부 견제

후반기 첫 7월 임시국회 개최
현안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예상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의 막을 올린다.

국회 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산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경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화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특히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어지며 개혁입법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5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역시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

제 등을 적극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방송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드루킹 사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 방지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17개 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원구성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에 대한 여야 논의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다.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순식간에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재공전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권이 민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을 제기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추면 정국은 또다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국회 원구성 논의가 늦어지면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한도 넘긴 상태다.

오는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선수·노정희 후보자의 이력 등을 거론하며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18일로 예정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동반 미국 방문은 향후 정국 순항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 양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당적 협치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北·美 유해송환 회담... 종전논의 할까

유엔사-북한군 9년만의 장성급회담

판문점서 첫 '유해송환' 의제 다뤄
송환 절차·방식 주로 협의할 예정

북한과 미국은 15일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을 했다.

정부 및 주한미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계부터 판문점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관련 회담을 진행했다. 유해송환의 시기 및 송환방식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공군 소장인 마이클 미니한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이, 북측 대표단에는 미국과 같은 급(별 2개·북한 계급상 중장)의 인민군 장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측 장성의 소속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KPA)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미국 측 회담 대표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차량 3대가 오전 8시 20~35분에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해 유엔 깃발을 단 뒤 판문점 쪽으로 향했다.

2009년 3월 개최 이후 열리지 않았던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이 9년 4개월 만에 열렸다. 미 공군 소장과 북한군 중장(우리의 소장)이 대표로 참석한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1998년부터 16차례 개최된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정전협정 준수 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됐고, 미군 유해송환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북미 판문점 회담이 열리는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미군 차량이 유엔깃발을 달고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에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북한이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편성된 유엔군사령부 측에 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미국 측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당초 미국 측은 대령급 회담을 하려 했으나 급(級)을 높이는 북한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였다.

정부 소식통은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유해송환 문제만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유해송환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모종의 요구를 하거나, 정전체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협의할 후속 장성급 회담을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군 유해송환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9년여 만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함에 따

라 양측이 이 채널을 상시화하고 의제를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측이 북미 장성급 회담 채널 복원에 합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날 회담에 장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일단 2009년 3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북미 간에 장성급 회담이 열리게 됐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에 국한된 회담으로 여기고 있어 보이며, 이와는 달리 회담 참석자의 급(級)을 올리자고 제안한 북한의 속내는 다를 수 있어 보인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우선 장성급 회담 채널의 복원과 지속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나쁜 징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끊겼던 장성급 협의 채널을 복구하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북미 간에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두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

김진표, 민주 당대표 출마 공식선언

"유능한 경제정당 대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5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바퀴와 함께 혁신성장의 바퀴를 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중소벤처 창업 열풍으로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있을) 다음 총선은 경제총선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경제를 개선하지는 않고는 결코 승리하기 어려운 선거인만큼 이번 전대가 대권 주자 쟁탈전이 돼선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산~개성 경의선 철도 이번주 공동점검

南·北, 회담 합의사항 본격이행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무급에서 진행됐던 철도·도로·산림 분야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합의사항 이행의 첫 테이프는 철도 분야의 협력사업이 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26일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연결구간 공동점검, 북측 구간 공동조사 등을 합의했다.

이중 가장 먼저 진행하기로 한 사항이 7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산~개성 간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남북 간 철도 분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경의선 연결구간 공동점검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등을 중

심으로 공동점검에 나설 인력을 선별하고 주요 점검 사항들을 정리하며 공동점검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에 이어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24일부터는 경의선 북측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주 산림 분야의 협력사업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4일 열린 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장방문을 7월 중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달 28일 도로협력분과회담을 열고 경의선 도로 개성~평양 구간과 동해선 도로 고성~원산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가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되며 이어 동해선에서도 진행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